

'귀멸의 칼날'에 2030이 열광하는 이유

에스프레소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올해 국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지난 22일 누적 563만 8000여 관객을 기록해 한국 영화 '좀비발'을 제쳤다.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이 박스오피스 연간 1위를 차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귀멸의 칼날'은 일본 다이쇼 시대 소년 검사(劍士)들 이야기다. 주인공 탄자로는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인 '복귀'에게 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여동생도 도깨비가 된다. 여동생을 사람으로 되돌리기 위해, 탄자로는 도깨비를 부대인 '귀살대'에 들어가 분투한다. 주인공이 동료들과 성장해 나가며 겨우에 맞서는 플롯은 일본 소년 만화의 전형이다.

임체적 캐릭터는 이 작품의 매력으로 꼽힌다. 혈귀들은 비록 인간을 잡아먹는 악당이지만 저마다 사연이 있다. 인간 사설 겪은 가난과 차별, 가족 잃은 원통함은 도깨비가 되고 난 후 악행의 기제로 작용한다. 가해자가 된 피해자 이야기는 우리나라 공포물에서 접할 수 있는 한(恨)이라는 정서와도 닮아 있다. 주인공은 혈귀들의 안타까운 과거에 연

민을 갖지만 심판을 미루지는 않는다. 그들이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악행과 단죄'는 귀멸의 칼날의 뼈대를 구성하는 핵심 서사다.

주요 팬층은 2030세대다. 이들은 왜 일본 검사 이야기에 열광할까. 사람들은 은민화나 소설, 영화 같은 가상 이야기를 통해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권선징악으로 암죽되는 귀멸의 칼날의 교훈은 이런 점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짓값을

권선징악 없는 현실의 보상심리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정치권은 왜 악당들을 비호하나 청년들은 정의·공정을 요구한다

치른다는 단순한 메시지는 지금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일상에서 경험 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전한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면 바보 취급 받는 시대 아닌가.

한국의 검사(檢事)들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챙길 길을 열어주었다. 일당은 동결된 자기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권은 애써 피해액을 축소하고 "민사로 환수하면 된다"는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는다. 대한민국에서 악당들은 처단되지 못하고 오히려

려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다. 어디 대장동만 문제인가. 임시 버리, 개발 비리로 수사받은 정치인들은 열사 내지는 숭고한 피해자로 둔갑한 지 오래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후원금을 횡령해도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정의와 공정을 요구하는 청년들에겐 "능력주의에 찌든 극우"라는 비난이쏟아진다.

정부 여당은 일부 정치검사를 문제 삼아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든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한 이후 자본시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주요 경제 범죄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치솟았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는 모양이다. 검찰 입건 마약 사범도 2020년 5974명에서 2023년 8342명으로 39.6%나 증가했다. 시기꾼과 마약 사범이 속출하는데 수사 지휘 공백으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자들은 탐정 역할을 해줄 변호사를 찾는 등 자력 구제에 나서고 있다.

검찰청 폐지로 국민적 피해가 커질 거라는 우려에도 정부 여당은 들은 체도 안 한다. 진영 논리라는 도깨비는 상식을 파괴하고 민생을 깎아먹는다. 범죄자는 비호받고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판검사는 모욕을 당하는 기이한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나라에서 권선징악이 제대로 실현되길 기대하는 건 육심일까.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정의와 상식의 칼날'을 휘둘러줄 검사는 어디에 있는가.



파도바시로부터 이 그림을 의뢰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로 보고된 게 2019년 11월이다. 그 때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치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화살처럼 온 인류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부을 줄은 몰랐다. 전염병도 무서웠지만 팬데믹 초기 어찌다 화살을 먼저 맞은 이들에게 쏜 아진 냉대는 지금 생각해도 오싹하다. 우리가 서로에게 쏘아 던 비난의 화살이 어찌면 바이러스보다 더 아픈 상처를 남긴 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08]

우리가 서로에게 쏜 '화살'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의 거장 안드레아 맨테나(Andrea Mantegna·1431~1506)가 그린 성 세바스티아노다. 3세기 로마 제국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근위대장이던 그가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자 화살을 쏘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설에 의하면 기둥에 묶인 성 세바스티아노는 '고슴도치처럼' 수많은 화살을 맞았지만,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이후 그는 당당히 황제 앞에 나아가 죄를 꾸짖고 결국은 봉동이에 맞아 숨졌다고 한다.

성 세바스티아노는 4세기부터 군인과 운동선수의 수호 성인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흑사병이 창궐한 중세 이후로는 전염병을 막아주는 성인으로 추앙받았다. 흑사병이 어디선지도 모르게 갑자기 날아들어 피부를 훔쳐는 화살처럼 치명적일 뿐 아니라, 피고름이 흐르는 종기가 마치 화살 자국 같았기 때문이다. 온몸에 화살을 맞고도 일어난 성 세바스티아노는 현대 의학 이전, 온갖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운명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던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실제로 맨테나는 당시 그가 살던 파도를 덮친 흑사병에서 살아남았고, 전염병이 물러난 이후

반(反) 기업적 악법이 쏟아지고 기업 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와 고용에 모두 빨간 불이 켜졌다. 현 정권은 주가라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경제·기업 체력이 허약해지는 상황에서 지속적 주가 상승은 힘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풀리즘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맨큐의 경제학》을 비롯 모든 경제학 책은 내년 져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도 따놓은 당상이다.

정치와 사회 쪽으로 눈을 돌려도 "정말 이게 나라나?"라는 탄식이 나오다. 좌의세력 장악 국회에서 만든 악법들을 토대로 자유 대한민국 국가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작업이 거칠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법치의 외피는 갖추었지만 언증, 내용은 반(反) 법치주의적-인권탄압적-편향적 법집행이 경찰·검찰·특검·공수처·법원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종북 좌익이 우파를 고소고발하면, 드릴같이 체포·구속한다. 좌파에 대한 고소고발은 시간을 끈 다음, 면죄부를 주곤 한다.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데...

20세기 경제 기적으로는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전후 부흥도 경이적이다. 두 나라는 20세기 초에 세계적 강국이었다. 전쟁에 패했지만 인적 자원과 노하우가 있어 전후 부흥은 시간문제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은 불가능에 가까운 진정한 기적이다.

국수주의 학자들은 《이씨 조선》을 칭송하지만, 조선 후기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복귀에 259억 원, 그 빈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데 238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드는 비용이 800억 원이었다. 총 1300억 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은 명분이 있었다. 청와대는 국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곳이 아니었다. 불통과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었다. 외부와 절저히 격리돼 있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무엇을 하는지 국민은 물론 출입 기자도 알기 어려웠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들이 일하는 여민관 사이 거리도 500m가 넘었다. 미국·영국 등의 정상 집무실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 국가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크기도 25만평으로 미 백악관(7만 3000㎡)의 3.4배다. 영국 다우닝가의 총리 관저는 연립주택식 3층 건물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이전을 공약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이 동의했다. 그런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등 대안이 많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고집했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태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국방부를 통째로 옮기는 무리를 왜 하나. 국방부가 옮기면서 합동참모본부가 또 옮겨야 했다. 모두가 중대하고 복잡한 군사시설이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애초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반대했고 보안·의전에도 적합하지 않아 청와대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러나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있었던 곳을 쓰기 싫은 게 속마음일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실이 나간 뒤 공원으로 개방됐다. 수많은 사람에게 공개된 이곳으로 복귀하면 보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다. 청와대 복귀는 다시 구중궁궐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워낙 활동한 일이었던 탓에 이 정부의 청와대 복귀에 반대 목소리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윤 정부의 무리한 용산 이전과 이 정부의 청와대 복귀로 결국 국민 세금 1300억 원을 허용으로 날아가게 됐다.

대통령이 북 주민은 인터넷 못 쓰는 것도 모른다니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외 기자 간담회에서 "대북 방송 왜 합니까, 끌어내세요"라며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라고 했다. "요즘 세상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뭔 대북 단파방송을 합니까, 그것도 돈 들잖아요"라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북 확성기 중단, 전단 단속에 이어 국가정보원이 50년간 해오던 대북 라디오·TV 방송도 모두 꺼버렸다.

북한은 주민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다. 싱가포르 데이터 분석 기관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 사용자는 1000명 미만이라고 한다. 세계 최하위다. 김씨 일가 등 극소수 특권층만이 인터넷을 쓴다. 연구원 등이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특급 기밀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른 정보를 검색하지 않는지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 탈북민들의 증언이다.

나머지 99.9% 주민은 외부로 연결된 인터넷은 쓰지 못하고 내부 통신망에만 접속할 수 있다. 내부망에는 외부 정보가 하나도 없다. 평양의 외국 대사관 주변엔 휴대전화를 들고 배회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한다. 혹시 무선 인터넷이 잡힐까 기대하는 것이다.

수백·수천 하청 노조와 교섭하라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된 일이지만 노사 교섭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도 원청 회사와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이다. 반발과 비판이 커지자 노동부는 시행령 등으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령을 보니 비판을 수용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노사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청 노조도 원청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시행령이라면 기업들은 1년 내내 원청·하청 노조와 교섭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1차 협력사 300여 곳, 2·3차 등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8500여 하청 업체를 두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사만 2420곳, 삼성중공업은 1430곳, 한화오션은 1334곳에 달한다. 이를 하청 노조가 원정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벌일 수 있다. 글로벌 초경쟁 시대에 기업의 벌목을 잡아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이미 법을 시행하기도 전인데 "원청 기업이 나서라"는 노조

압박이 많은데, 법을 시행하면 전국 사업장에서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섭 단위가 늘어나면 교섭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는 것은 상식이다. 하청 노조 교섭 테이블이 여러 개로 나뉠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도 하청 노조들의 과도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의 폭력 행위나 작업장 점거 등이다시 반연합 우려가 있다. 또 이번에 노란봉투법을 만들면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영계에서는 인수·합병이나 공장 이전, 해외 투자 등까지 노조 파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은 출연·죽는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뒤에서 노조 편만하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내년 시행 전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을 하겠지만 민주당이 응할 리 없다. 막대한 가계 부채, 환율 불안, 부동산 불안, 트럼프 관세, 엄청난 대미 투자 부담 외에 우리 경제에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올려졌다.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가의 자살? ... 오로지 코스피 상승에만 혈안

뉴데일리
newdaily.co.kr

원화 가치 폭락 → 환율 급등 → 외환 위기? | 성장 엔진 꺼져가고, 국가 채무 급증, 국가 정체성도 위협받고 | 실패한 국가서 나타나는 전형적 패턴



◀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인가. 이제 정권은 역전 극장꼴이 아니라 자살꼴 불기 일보 직전이다.

© 첫Gpt

문재인 정권 1층, 이제명 정권 지하실

문재인 정권 시절 "개인이 자살하는 것은 봤어도 국가가 자살로 가는 것은 한국에서 처음 보는 것 같다"는 어느 외국인의 말이 화제가 됐다. 같은 좌파라도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위험하고 무능하며 망국적인 좌의 정권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보다 막가는 정권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좌각이었다. 1층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 12월 이면 출범 6개월을 맞는 이제명 정권은 그야말로 《1층 밑에 지하실》이다.

최근 한국의 추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원화 가치 급락》이다. 우리 돈이 휴지 조각으로 녹아간다는 말도 나온다. 곧 달려당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도 아닌데 그렇다. 돈을 살포한데다, 원화 가치 급락 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외식물이나 밤상물가는 오르고 또 오르고 있다. 실패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패턴이다.

반(反) 기업적 악법이 쏟아지고 기업 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와 고용에 모두 빨간 불이 켜졌다. 현 정권은 주가라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경제·기업 체력이 허약해지는 상황에서 지속적 주가 상승은 힘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풀리즘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맨큐의 경제학》을 비롯 모든 경제학 책은 내년 져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도 따놓은 당상이다.

정치와 사회 쪽으로 눈을 돌려도 "정말 이게 나라나?"라는 탄식이 나오다. 좌의세력 장악 국회에서 만든 악법들을 토대로 자유 대한민국 국가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작업이 거칠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법치의 외피는 갖추었지만 언증, 내용은 반(反) 법치주의적-인권탄압적-편향적 법집행이 경찰·검찰·특검·공수처·법원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종북 좌익이 우파를 고소고발하면, 드릴같이 체포·구속한다. 좌파에 대한 고소고발은 시간을 끈 다음, 면죄부를 주곤 한다.

역사를 읽다 보면 한숨만 나온다. 무능한 국왕과 신하들이 저항 한 번 안하고 나라를 헌납했다. 해방 후에는 분단됐고, 북한의 남침전쟁으로 나라는 젓더미로 변했다. 4·19 ~5·16 사이 사회를 묘사한 소설들에는 부모가 시골에서 등골 빠지게 마련한 돈으로 번듯한 대학을 졸업한 '하얀 손의 실업자들'이 등장한다.